

3. 主要 政策 解説 (97. 7. 14 ~ 97. 8. 10)

- 건설교통부, 「자동차 1,000만 대 시대의 교통 종합 대책」 마련 (7.14)
 - 차고지 확보제, 주말 차량제, 통근버스 공동관리제, 도심주차장 상한제, 혼잡 통행료 부과 등 교통 수요 억제 정책 실시
 - 2011년까지 6대 도시의 도시철도 1,461km를 건설하는 등 대중 교통망을 확충
- 정보통신부, 「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CALS/EC 촉진방안」 마련(7.18)
 - 2001년부터 모든 정부 조달 업무를 전자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
 - 전자 상거래 도입을 활발히 하도록 민간 부문의 기술 개발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고, 전자상거래기본법, 전자서명법 등을 제정
- 통상산업부, 「무역수지 개선 종합 대책」 마련 (7.22)
 - 5대 정책 과제로 경쟁력 요소 개선, 주요 업종별·시장별 대책, 기업 및 산업구조 개선, 무역제도 관련 지원제도 개선, 재활용 및 에너지 소비 절약을 선정
- 재정경제원, 「금융 개혁 법률안」 입법 예고 (7.24)
 -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은 2000년부터 정부기구화
 -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채권 매입제도 도입
- 통상산업부, 「기업 물류 예로 개선 대책」 마련 (7.28)
 - 자연 녹지 지역내 창고 시설을 토지 형질 변경 허용 대상에 포함
 - 항운 노조의 독점적인 노무 공급권을 폐지하고 작업 범위도 부두 내로 제한
- 재정원·통산부, 「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방안」 마련 (8.1)
 - 현재 800cc인 경승용차의 범위를 1,000~1,300cc로 조정하고, 각종 혜택도 확대
 - 경유 가격을 OECD 비산유국 평균 소비자 가격 수준으로 상향하여 현실화
 - 서머타임제 도입,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위한 실천 계획 추진
- 내무부, 「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」 마련 (8.5)
 - 법인 소유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과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,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
- 재정경제원, 「구조조정 촉진책」 마련 (8.7)
 -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, 기업 통합 및 업종 전환에 대한 양도세와 합병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확대